

# 서울특별시의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38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22일

발 의 자 : 김종욱, 김광수(노원), 양준욱, 서윤기,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양천), 김경자(강서), 김광수(도봉),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을,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김영한,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 청, 유찬중,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홍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의원(79명)

## 1. 주 문

- 서울시의회는 박근혜대통령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있어,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민의 안전,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국가권력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외교·행정·안보 등 국정 모든 분야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제1조의 기본정신에 위배됨.
-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민의 준엄한 판단을 받게 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헌법」
- 나. 기타사항 :

## 4. 이 송 처

-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정무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류공영의 이바지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헌법전문은 밝히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국민에게서 얻었음도 불구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키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특권과 출세기를 조장하고, 눈치 보는 국가권력으로 전락시켰으며,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안전, 자유,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갔다.

국민은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국정 모든 분야에 개입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여 최순실 및 청와대 비서들, 그리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그 동안 숱한 의혹은 음모론으로 그쳤지만, 지금은 다르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과 일부 비선실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결과를 보고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 국민은 1960년 4. 19와 1987년 6. 10을 통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또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여야, 좌우, 남녀노소, 지역 구분 없이 대한민국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토록 바라던 국민대통합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소통 중단, 비선실세 운영으로 통치권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상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4·19혁명과 6·10항쟁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범죄자로 검찰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 분노는 퇴진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의 ‘꼬리 자르기’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본질을 밝혀야 한다. 복마전을 파헤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근원임을 부정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의 정책이 ‘바른 것’으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한반도 사드배치, 개성공단의 폐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불통국정, 국가권력이 살해한 농민, 그리고 세월호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장성하여 이런 사실에 침묵했던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나서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2016. 11.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